

## 기획특집

### 가족 다양성 이슈와 대응 과제

- 가족 다양성의 존중을 위한 정책·제도적 과제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의 의의와 과제

박복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친족 가구 현황과 정책적 함의

김영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가족 다양성의 존중을 위한 정책·제도적 과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서론: 우리 사회 가족의 변화

“가족이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가족” (김희경, 2023: 291)이라는 말은 변화하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최근 상속법의 이슈였던 ‘구하라법’ 개정<sup>1)</sup>은 가족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남보다 못한 가족도 법률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권리를 다 인정받아야 할까? 반대로 법에서는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살아가며 정서적 지지와 돌봄을 함께하는 관계들을 정책과 제도에서 소외하고 배제하는 것은 적절할까?

우리 사회는 가족 구조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가

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등 가족 다양성이 증대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40만 건을 상회하던 혼인 건수는 2000년대 이후 30만 건대로 감소하였고 2020년대 이후 19~22만 건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통계청, 2025.3.20.: 4).<sup>2)</sup> 2024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41.5%에 이른다(통계청, 2024.11.12.: 11). 특히 미혼 남성의 경우 해당 응답의 비율이 47.8%인데 반해, 미혼 여성의 경우 61.9%에 이른다(통계청, 2024.11.12.: 11).

가구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형태는 감소하고 있고 1인가구의 증가가

1) 소위 ‘구하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상속권 상실을 인정한 제도(민법 제1004조의2)로서 2024.9.20. 개정되어 2026.1.1. 시행할 예정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에서 검색. 접속일 2025.2.1.). 법적 가족이라도 남보다 못한 가족에게 가족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 감정도 개정과정에서의 여론에서 엿볼 수 있다. 관련 기사로는 한경LAW&BLZ(2025.5.16.). ‘구하라법’이 묻는 가족의 진짜 의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68484i>(접속일: 2025.5.20.) 참고.

2) 통계청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증가가 코로나19 이후의 일시적 회복인지, 반등 추세로 전환된 것인지의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별도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띈다. 1인가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그 비중이 34.1%에 이르러 이미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52년에는 41.3%로 장래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4.9.12.: 4). 또한 혼인관계도 혈연관계도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비친족 가구의 비율은 2022년 2.3%로, 아직은 작은 비중이지만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52년에는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24.9.12.: 25).

한편으로 혼인이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관계에 대한 수용성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24년 67.4%로 2년 전보다 2.2%p 증가하였으며, 2012년(45.9%)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4.11.12.: 13).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2024년 37.2%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4.11.12.: 13).

가족 다양성의 확대는 저출생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와 혼인율 감소, 고령 인구의 확대에 따라 기존 가족의 틀을 넘어서 다양한 관계에서의 친밀성과 돌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송효진·안소영, 2022: 181).

## 2. 친밀함과 돌봄을 함께 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

양한 관계에서 친밀함과 돌봄을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은 미래 전망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비혼동거는 젊은 세대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중장년·노년 세대에서도 낯설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비혼동거 실태분석 연구-2020년 가족실태조사 부가연구」<sup>3)</sup>에 의하면, 동거 사유(1순위 응답)로 비혼동거 중인 응답자의 17%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를 꼽았고, 다음으로 ‘곧 결혼할 것이라서’(11.5%),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여’(9.5%) 순이었다(김영란 외, 2021: 39). 20~30대는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여’, ‘곧 결혼할 것이라서’ 동거 중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던 반면, 40~50대는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응답률이 높았으며, 60대 이상의 경우 ‘결혼하면 소득이나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워’가 12.5%로 나타났다(김영란 외, 2021: 39). 비혼동거의 가장 큰 이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연스럽게’라는 점은 가족과 관계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세대별로 비혼동거의 주된 이유가 다르다는 점도 흥미롭다.

나아가 이러한 다양한 삶의 형태와 관계는 섹슈얼리티 기반의 커플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확장되고 실제 삶에서 구현되고 있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김하나·황선우, 2019)이라는 에세이는 2019년에 발간된 후 많은 화제가 되었고 최근(2024년)에는 개정증보판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저자들은 혼자도 결혼도 아닌

3) 조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만19세 이상~69세 이하 일반 국민 중 현재 남녀가 동거하고 있거나 과거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김영란 외, 2021: 30).

그들의 삶의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인가구는 원자와 같다. 물론 혼자서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다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다른 원자와 결합해 분자가 될 수도 있다. 원자가 둘 결합한 분자도 있을테고 셋, 넷 또는 열 줄이 결합한 분자도 생길 수 있다. 단단한 결합도 느슨한 결합도 있을 것이다. 여자와 남자라는 원자 둘의 단단한 결합만이 가족의 기본인 시대는 가고 있다. 앞으로 무수한 다양한 형태의 ‘분자가족’이 태어날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가족의 분자식은 W2C4쯤 되려나. 여자 둘 고양이 넷. 지금의 분자 구조는 매우 안정적이다(김하나·황선우, 2019: 12).

혈연이나 혼인에 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삶은, 노년기에 외로움을 덜고 서로 의지하며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년 전 “세 할머니의 유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방송과 신문 등 다양한 미디어에 소개된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비혼인 두 할머니와 남편과 사별한 한 할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귀촌 후 한 집에서 함께 살며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노년의 삶을 공동으로 꾸려가고 있다. 법적으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생활하면서 정서적 지지와 돌봄을 함께 하는 것이다. 비혼인 할머니 둘은 젊어서 직장동료로 만나 노년까지 함께 살면서 귀촌하여 “노루목 향기”로 이름 붙인 집을 짓고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가 된 또 다른 친구가 합류하여 세 할머니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소개 기사를 발췌하여 인용하여 본다.

아들이 서울에서 모시고자 했을 때 거절했다면서 “서울에는 친구가 없기 때문이다. 하소연도 하고 수도 또 떨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냈을 때, “가끔 아들이 왔다가 서울로 갈 때면 나 혼자 두고 서울로 가기가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대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 폭 놓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할머니들은 단순한 ‘식구’를 넘어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sup>4)</sup>

혼인이나 혈연에 기반한 관계가 가족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혼인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혼자 또는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형태에 있어 보다 다양한 선택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 당위가 아닌 선택이 되고 사회가 고령화되며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은 생애주기 속에서 혼자일 때와 함께일 때를 오가며 다양한 가족 구성과 관계를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다. 결혼이 당위적 규범이었던 베이비붐세대 이상의 고령층 또한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비록 결혼생활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더라도 사별 등의 이유로 생애 중 일정 기간은 싱글로 살아가는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황혼에 재혼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자연스럽게 비혼동거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 ‘이미 한 번 해본 결혼을 꼭 다시 해야 할까?’, ‘외롭지 않기 위해 반드시 법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세 할머니처럼,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노년의 삶을 기획해 보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가족, 사회,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결혼보다 덜 부담스럽고 다소 느슨한 관계, 그리고 커플 중심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관계에 대한 욕구와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 아시아뉴스통신(2021.9.10.). ‘다큐온’,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https://www.anews.com/detail.php?number=2487325> (접속일: 2025.1.10.).

### 3. 현행 제도의 한계

친밀함과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관계와 삶의 형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러한 가족 다양성이 아직은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와 정책이 혈연 및 법률혼 중심의 가족만을 주로 전제하고 있어,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는 친밀성과 돌봄을 함께하더라도 의료, 장례, 돌봄, 주거 등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의료 영역에서 비혼동거 파트너는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 시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선행 연구(송효진 외, 2019: 59)에 따르면, 이는 제도의 근본적 문제보다는 인정 범위에 대한 병원별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며, 의료 현장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 외에도 진단서나 처방전의 대리 발급 등에서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생기는 불편함이 확인되고 있다. 진단서 등의 발급에 있어 의료법은 '환자 본인이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로 직계존비속, 법률혼 배우자,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어(의료법 제17조), 비혼동거 관계 등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의 경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방전 역시 최근 대리수령자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지만(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혈연 및 법률혼으로 가족관계 증명으로 증명이 가능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일정한 자격

을 취득한 자'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관계 증명이 어려운 다양한 관계들은 대리수령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함께 일상의 돌봄을 주고 받지만 법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처방전 대리수령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가족돌봄지원제도의 이용 역시 여의치 않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가족돌봄지원제도의 요건으로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에 한정하고 있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송효진 외, 2019: 52),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최근 10일에서 20일까지로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 역시 법률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나, 비혼 관계 파트너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sup>5)</sup>

몇 년 전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도 연고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sup>6)</sup>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그 후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업무안내 지침<sup>7)</sup>을 개정하여 법적 가족 등 우선 순위의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나 비혼동거 파트너 등이 장례주관자 신청을 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위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주관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심사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아닌지라 소명

5)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는 동법에서의 '차별'의 정의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6) 기사 내용은 송효진 외(2019, 61) 주2) 참조.

7) [보건복지부 2024 장사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2024: 222)

시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 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음.  
-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과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송효진, 2025: 49).

비혼동거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들은, 특히나 주거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그들의 공동생활 관계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정 정도 보호가 되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sup>8)</sup> 그 외 비혼동거 내지 생활돌봄공동체 관계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는 「건강가정기본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고, 이들 관계에서 행해지는 돌봄과 부양의 실질은 각종 세액공제, 가족수당, 사회보험 등에 고려되거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일상 속 다양한 불편 사례들은 모두 ‘관계 증명의 어려움’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관계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배제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장례주관자 등을 지정할 때 위와 같이 소명자료 마련·신청·심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다. 현장 정책담당자들의 입장에서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 부담은 정책 대상의 확대에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를 통해 등록과 증명이 어려운 다양한 관계들을 위한 새로운 관계 등록 및 증명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것이다. 관계 등록 및 증명제도는 친밀함과 돌봄을 함께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관계 당사자들이 시민으로서 정

책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공적 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비혼동거와 같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의 경우,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러한 관계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 간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예를 들어 관계 해소 시 재산 청산과 관련된 문제 등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은, 제도 밖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소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 4. 국내외 정책 및 제도 동향

### 가. 국내 정책 및 제도 동향

가족 다양성 존중을 위한 정책은 여성가족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및 정부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으로서도 최근까지도 정책적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그 목표에 “가족 다양성 인정”을 포함하고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등을 과제로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21: 1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도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이 추진 과제로 포함되었다(대한민국 정부, 2021: 159).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에서 검색. 접속일: 2025.2.1.).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2개의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21647, 의안번호 2122404)이 발의된 바 있다<sup>9)</sup>. 법률안들은 모두 21대 국회 임기만으로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혈연 또는 혼인 외의 이유로 형성, 유지되는 2인 간의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해소와 등록·증명, 관계의 효력 및 권리 의무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생활동반자제도의 주요한 의의는,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돌보는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등록 및 증명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정책 및 기타 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위 법률안들에 의하면 생활동반자관계란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1647) 제2조 제1호) 내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이 아닌 성인과 다른 혼인 중이 아닌 성인 1인이 합의 하에 일상생활, 가사 등을 공유하고 생활돌봄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22404) 제2조)를 말한다.<sup>10)</sup>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sup>11)</sup>에서는 “사회적 가족” 개념 등 다양한 돌봄공동체 내지는 사회적 연

대체의 포용을 위한 접근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sup>12)</sup>는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가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기본 원칙의 하나로 규정하고<sup>13)</sup> 사회적 가족 개념을 조례에 담고 있다. 동조례가 정의하는 사회적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sup>14)</sup>이다. 이들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가족 관계의 등록이나 증명, 성립과 해소, 권리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당 조례는 행정적 정책·사업의 근거 조항의 성격이고, 관계의 실체적·절차적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실천을 어떻게 제도에 담아갈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하나의 참조 사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외국 사례

외국의 입법례 중 잘 알려진 사례로는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e)이 있다. 프랑스는 1999년 두 사람 간의 법적 결합을 인정하는 제도로써 시민연대계약을 도입하였으

9)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검색(접속일: 2025.2.1.)

10)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검색(접속일: 2025.2.1.)

1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조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에서 검색, 접속일: 2025.2.1.)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에서 검색, 접속일: 2025.2.1.)

1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5조 제1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에서 검색, 접속일: 2025.2.1.)

14)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 제3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 에서 검색, 접속일: 2025.2.1.)

며, 이를 민법전(Code civil)에 규정하고 있다. PACS는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등록(신고)하여 사증을 교부받아 성립하며 법에서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 인정되지 않고 인척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혼인에 비해 관계 해소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송효진 외, 2021: 183~193 참조).

섹슈얼리티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생활·돌봄을 함께하는 관계를 제도에서 포섭하고 있는 외국 입법례로는 캐나다 앨버타주의 「성인 상호의존 관계법(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Act)」<sup>15)</sup>과 호주 빅토리아주의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sup>16)</sup> 등을 들 수 있다(송효진, 2021: 195).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혼인한 관계나 커플이 아니라도 가족이든 아니든 돌보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송효진, 2021: 195).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아직은 보편적이고 지배적인 입법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화·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 사회에서 볼 때 돌봄 관계에 관한 이러한 외국의 입법 움직임은 눈여겨 볼 만한 참조 사례이다(송효진, 2021: 195).

## 5. 결론: 정책·제도적 과제

가족 형태의 다양화와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관계와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 구성에 대한 선택권은 법과 제도를 통해 보장되어야 하며(송효진 외, 2021: 340), 다양한 관계에서 당사자들이 겪는 소외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등록 및 증명 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로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절차적 규율로서의 등록·증명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계의 성립과 해소,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는 실체법적 제도화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sup>17)</sup>

나아가 제도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세 할머니 사례'처럼 점점 더 다양해지는 관계 구성의 유연성과 삶의 욕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섹슈얼리티에 기반한 커플 관계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 및 돌봄 중심의 다양한 관계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노인돌봄공동체나 장애돌봄공동체 등 여러 당사자로 구성된 공동체 가족을 제도 안으로 어떻게 포함시킬지, 또 동거와 비동거를 넘나드는 느슨한 형태의 생활·돌봄 공동체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송효진, 2023.5.15.: 56~57).

아울러 제도적 결합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고 돌보는 일상적 관계에 대해 의료·돌봄·주거 등 관련 영역에서 당사자가 지정한 사람이 필요한 사무를 대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선하거나 이를 정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송효진 외, 2021: 341).

15) 관련 상세 내용은 안소영·송효진(2021). 비성애적 관계의 법적 승인에 대한 캐나다 입법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6(2), 69~96 참조.

16) 관련 상세 내용은 송효진·안소영(2022). 돌봄관계에 대한 법적 승인 및 등록에 대한 호주 입법례 연구: 호주 빅토리아주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2), 179~220 참조.

17) 이와 관련한 생활동반자 제도의 필요성과 법적 사항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황두영(2020). 외롭지 않을 권리-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시사IN북 참조.



당사자가 기꺼이 선택하여 상호 돌봄과 부양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여도 제도적 승인과 지원을 법률혼에만 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의 돌봄·부양 상황을 제도에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공적 부양 비용 부담과 부양 체

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을 저해한다(송효진 외, 2022: 99-100 참조). 가족 변화와 저출생·고령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친밀성과 돌봄 관계에 대한 제도적 승인과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 • 참고문헌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접속일: 2025.2.1.).
- 김영란 외(2021). 비혼동거 실태 분석 연구-2020년 가족실태조사 부가 연구. 여성가족부.
- 김하나·황선우(2019).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혼자도 결혼도 아닌 조립식 가족. 이야기장수.
- 김희경(2023). 에이징 솔로. 동아시아.
- 대한민국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main.html>(접속일: 2025.2.1.).
- 보건복지부(2024). 보건복지부 2024 장사업무 안내.
- 송효진(2021). 가족다양성 보장을 위한 법제 대응에 있어 쟁점 고찰: 다양한 파트너십과 공동체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3(3), 185-214.
- 송효진(2023.5.15.).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영향과 과제” 토론회. 새로운 가족의 탄생-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 송효진(2025.2.20.). 비혼동거 증가,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 저출생 극복, 비혼 출생아 지원 제도화 국회 토론회 자료집.
- 송효진·김소영·선보영·홍윤선(2022). 가족변화 대응 부양제도 정비 방향 및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송효진·박복순·최진희·김수진·성경·이재경(2019).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제도화 기반 마련 연구. 여성가족부.
- 송효진·안소영(2022). 돌봄 관계에 대한 법적 승인 및 등록에 대한 호주 입법례 연구: 호주 빅토리아주 2008년 관계법(Relationships Act 2008)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14(2), 179-220.
- 송효진 외(2021).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구축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아시아뉴스통신(2021.9.10.). ‘다큐온’, 세 할머니의 유쾌한 동거 <https://www.aneusa.com/detail.php?number=2487325>(접속일: 2025.1.10.).
- 안소영·송효진(2021). 비성애적 관계의 법적 승인에 대한 캐나다 입법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논집, 26(2), 69-96.
- 여성가족부(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 통계청(2024.9.12.). 2022~2052년 장래가구추계 보도자료.
- 통계청(2024.11.12.). 2024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 통계청(2025.3.20.). 2024년 혼인·이혼 통계 보도자료.
- 황두영(2020). 외롭지 않을 권리-혼자도 결혼도 아닌 생활동반자. 시사IN북.
- 한경LAW&BIZ(2025.5.16.). ‘구하라법’이 묻는 가족의 진짜 의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68484>(접속일: 2025.5.20.).
- KBS(2024.9.6.). 가족도 아닌데 7년째 동거 중인 동갑내기 세 할머니,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https://youtube.com/watch?v=wjFRMb6yCOA&si=xiyV1QcqEnwQ-wG6>(접속일: 2025.1.30.).